

2006. 9. 13

미성년 혼인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

정혜선

 본원 연구원
 02-3156-7175
 hsjeong@kwdi.re.kr

미국에서는 지난 7월 힐러리 클린턴 외 상원의원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만연한 여아의 조혼을 방지하는 취지의 국제미성년혼인방지법(International Child Marriage Prevention and Protection Act)을 발의하였다. 평균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저출산이 매일같이 뉴스를 장식하는 요즘 조혼 문화는 멀리 오지사회에서나 있을법하게 들리지만, 아직까지 많은 국가에서 성행하고 있다. 국제미성년혼인방지법은 조혼, 특히 여아의 혼인이 여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의 빈곤을 심화시킨다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미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가 미성년자의 혼인을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각국의 혼인가능연령 관련 입법 및 관련법의 적극적 활용을 후원할 것, 국무부는 연간 인권보고서에 각국의 미성년 혼인 실태를 포함할 것, 관련 활동에 3년간 6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맥락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혼인가능연령을 남녀 공히 18세로 조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미성년 혼인(아래에서는 조혼으로 통칭한다)의 국제적 실태와 문제점,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알아본다.

조혼의 배경과 문제점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조혼은 매우 흔한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는 18세 이하 여아의 혼인율이 76.6%에 달한다. 방글라데시와 니카라과도 각각 68.7%와 43.3%를 기록하고 있다.¹⁾ 이들 국가도 혼인가능연령에 대한 법규가 있지만, 조혼율이 가장 높은 20개국 중 12개국은 연령제한이 18세 혹은 그 이상이다. 문화적인 풍습과 빈곤 등의 이유로 지속되는 조혼은 특히 여아의 경우 더욱 성행하고 있는데, 여아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월경을 시작하면 곧 학교 교육을 중

1) 저개발국의 혼인 관련 통계는 자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정략결혼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조혼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의 수치는 국가별로 활용 가능한 최신 통계와 20-24세의 기혼 여성의 혼인 시 연령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여성연구센터(ICRW)가 발표한 것이다(Analysis of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Data(2005)).

단하고 집안에서 혼인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전이 일어나거나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여아의 조혼은 증가하게 된다. 유엔은 향후 10년간에도 1억 명의 여아가 18세 이전에 결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혼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빈곤과 가부장적 문화가 자리한다. 빈곤한 사회일수록 여아를 가계의 부담으로 보고 장년 남성에게 일찍 시집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중동,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조혼이 가족과 딸에게 훨씬 이익이 된다는 관점이 팽배하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조혼이 매우 흔한 사회라 할지라도, 19세 이하의 남성이 혼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신랑이 신부의 값을 치르고 혼인하는 문화에서 남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결혼을 늦추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자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화는 부부의 연령차를 넓히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력차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 아동과 여성의 인권 문제

아동인권 운동가들은 조혼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경제활동에 참여할 권리, 친구들과의 우정과 청소년기를 즐길 권리를 박탈한다고 본다. 특히 미성년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교육이나 취업으로부터 격리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저개발국일수록 심하다. 여성단체들도 여성의 조혼이 여성의 교육, 경제적 자립, 보건 등에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여아는 혼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경제적 자립이 어렵게 되고, 이는 가정폭력 등의 위협으로부터 어린 신부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2) 모성보호의 문제

조혼한 미성년 여성은 아직 덜 성숙한 몸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산과적 손상의 위험과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은 심각하게 높아진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대략 15백만 명의 여아(15-19세)가 출산을 경험하는데, 이는 전체 출산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의 모성사망률은 20-24세의 출산여성에 비해 2배 높다. 10-14세 여아의 경우, 모성사망률은 20대 여성에 비해 5배나 높아진다.²⁾

3) 강제결혼의 문제

미성년의 혼인은 보통 집안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정략결혼보다는 그렇지 못한 강제결혼이 많아 문제가 된다. 서아프리카 베닌에서는 강제결혼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는데, ‘결혼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유럽에서는 무슬림 등 이민자 사회에서 강제결혼이 성행하자 이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국무총리실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10-18세의 청소년 7만여 명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3월 프랑스 국회는 이민자 사회에서 강행되는 조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여자 15세, 남자 18세였던 혼인가능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조정하였다.

4) 빈곤과 발전의 문제

2) 유엔인구기금(UNFPA)(2000) 자료를 Early Marriage(UNICEF, 2001)에서 재인용.

여러 국제기구와 NGO는 조혼이 혼인 당사자 개개인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30-50%의 여성이 18세 미만의 나이에 결혼하는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육이 단절되고 인구의 많은 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이 지속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04년부터 예멘에서 빈곤과 조혼의 연관성을 널리 알리고 조혼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여온 영국의 NGO 옥스팜(Oxfam)은 조혼이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달성에도 저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조혼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목표 1-4의 소기 목적인 바인 빈곤기아철폐, 초등교육, 양성평등, 아동사망률 감소를 저해한다. 또한 조혼은 대부분 여아에게 행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양성평등과 모성보호(목표 3, 5)의 달성에 지장을 준다. 뿐만 아니라 HIV/AIDS 등의 질병퇴치와 전지구적 파트너십 형성(목표 6, 8)에도 장애요인이 되므로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조혼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조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아에 대한 교육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을 늦추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리랑카와 인도의 케랄라 주는 주변 지역보다 평균혼인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여성에 대한 교육이 남성에게만큼 강조된다는 공통점이 관찰되었다. 또한 여아에게 안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조혼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관련 규정이 없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여자 18세/남자 18세를 혼인가능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의 혼인가능연령을 다르게 둔 경우, 보통 여자의 나이가 남자보다 2-4세 낮게 규정되어 있으며 다수가 여자 16세/남자 18세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 18세를 혼인가능연령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일반적인 근거로 활용된다. 이 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각국이 여성의 혼인가능연령을 18세로 규정할 것과 남녀에게 같은 혼인적령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남녀는 혼인함으로써 중요한 책무를 지게 되므로 충분히 성숙하여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기 전에는 혼인하지 않아야 한다. ... 일부 국가는 남녀에게 다른 혼인적령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과 남성의 지적 발달이 다르다거나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은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므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고 지적하고 있다.³⁾

나가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여성의 혼인가능연령을 남성과 같이 18세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이 이계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다. 현행 민법은 여자 16세/남자 18세를 혼인가능연령으로 두고

3) Equality in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CEDAW General recom. 21, 04/02/94.

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이 혼인의 조건으로 남자는 사회경제적 능력을 여자는 생리적 성숙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입장이다.⁴⁾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청소년 임신과 같은 사회문제를 혼인이라는 제도로 안정시킬 필요성을 들며 현행법이 양성평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남자는 가정의 책임자로서 일정 연령까지의 교육과 보다 높은 성숙이 요구되는 반면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남존여비의 풍습이 기존 연령 규정에 반영되어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혼은 아동과 여성의 인권과 동등한 사회참여에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한 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한다. 여성의 조혼은 여성을 아내 혹은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관습이다. 남녀의 혼인가능연령이 다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며, 혼인가능연령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혼인생활이 가능한 연령을 가장 합리적인 수준으로 선언’되어야 할 것이다.⁵⁾

4) 2000-2005년 우리나라에서 혼인하는 청소년(15-19세)은 연간 6천-1만여 명에 이른다. 남녀 비율은 1:4 정도로 여자가 월등히 높다. 15세 미만의 경우, 그 수는 매우 적으나 남녀의 비율은 더욱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2000년에 혼인한 15세 미만 청소년은 남자는 단 1명이었으나 여자는 65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KOSIS DB)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의견서에서 인용.